

2023년조 제34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 베타답안

<문1 40점>

(물음 1-1) 10점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 법적 성질

I. 논점의 정리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성질에 따라 권리구제 방법이 달라지기에 이하 이에 대해 검토한다.

II.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1. 의의 및 취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용수용 행정에 있어서 수용행정 적정화, 피수용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취지가 인정된다.

2. 법적성질

(1) 처분성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상 처분에 해당한다.

(2) 형성적 행정행위로 특허 및 재량행위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로

	특허에 해당하고, 토지보상법 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 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제3자효 행정행위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피수용자에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Ⅲ. 사업인정 고시 (토지보상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보상법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25조 토지 보전의무를 통한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적성질
	통지로 보는 견해와 사업인정과 같이 특허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불복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으므로 사업인

	정과 사업인정고시를 통일적으로 <특허>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IV. 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불복규정이 없어 일반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하게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물음 1-2) 20점 수용재결 불복 대상적격과 피소적격
	I. 논점의 정리
	토지소유자 갑이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모두 거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관하여 이하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II. 관련 행정작용의 의의 및 취지
	1.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34조)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 불성립*불능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 결정을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이다. 공*사익의 조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이의재결 (토지보상법 83조, 86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위법	
*부당에 대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구제에 그 취지가 있다.	
Ⅲ. 대상적격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논의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	
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	
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남용 방지 및 소송 경제상	
취지가 있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의의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재결주의>는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처분주의 법적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	

	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도 “제34조에 대한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3) 행정심판 재결의 고유한 하자의 의미 (96누14661)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3. 대법원 판례 (2008두1504)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해당 사안에서는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에서 수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13조)
	1. 의의 및 취지
	피고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되고, 이의재결이 소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될 것이다.
	2.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피고적격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수용재결에 불복 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08두1504).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이의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내

	용이 불명확한바, 토지소유자 甲은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적격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음 1-3) 10점 보상금 불복 적합한 소송 형태
	I. 논점의 정리
	토지소유자 甲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
	청을 거쳤으나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
	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적합한 소송의 형태
	1.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85조 2항)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검토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생각건대 값이 적은 보상금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다툼이 타당
	하다.

	III. 보상금증액청구소송
	1. 의의 및 취지(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
	사자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을 소송의 제기를 통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소송이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최근 토지보상법 85조 2항 개정으로 재결청이 피고에서
	삭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용재결의 내용을 다투면서도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확인, 급부소송
	학설은 <형성소송설>과 <확인급부소송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명한다는
	점에서 확인급부소송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재결청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보상금 증감
	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확인*급부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요건 및 특수성
(1) 제소기간 및 당사자
본래 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나, 토지보상법 제8
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
여 소를 제기한다.
(2) 심리범위
보상금의 범위, 금액이 심리범위에 해당하고 판례는 보
상금항목 간의 유용, 지연가산금, 잔여지수용도 심리범
위에 포함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IV. 결
피수용자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통해 적은 보상금 액
수와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다툼이 타당하리라 판단된
다.
<문제 2> 30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물음 2-1) 15점 개공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개공위법성
I. 논점의 정리

	<p>물음1에서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물음2에서는 甲 토지 중 1,670m² 은 현황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인 표준지공시지가를 선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한다.</p>
	<p>Ⅱ.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p>
	<p>1. 개별공시지가 의의 및 취지 (부동산공시법 10조)</p>
	<p>시군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하는 관할구역 내 개별토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지가산정의 활용에 그 취지가 있다.</p>
	<p>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부동산공시법 11조)</p>
	<p>(1) 의의 및 취지</p>
	<p>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시군구청장이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공시지가의 적정성 담보, 국민의 권익보호에 취지가 있다.</p>

	(2) 성격
	1) 구별실익 (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치고도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여 구별실익이 있다.
	2) 학설 및 관련 판례 (2008두19987)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보는 견해,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최근 판례(2008두19987)는 부동산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부동산공시법상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헌법 107조 3항의 사법절차 준용이 없는 점, 행정심판법 4조상 개별공시지가 사안에서 전문성*특수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결 (행정심판제기 가능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행정심	
판법 제51조 '재청구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제 27조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있는 날로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Ⅲ.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고찰	
1.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	
(1)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기준 (부동산공시법 10조 4항)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	
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	
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검토	
해당 토지 2,000㎡ 중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330m ² 이고, 나머지는 1,670m ² 는 밭으로 이용중이면 해당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있어서 대인 표준지 1개만 선택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위법한 표준지 선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검토
	사안의 경우 1,670m ² 는 현황 '밭'이나 '대'인 표준지를 선정한바 그 선정에 하자가 있고, 이는 동법 10조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정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위법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은 통설과 판례에 따라 중대명백설 관점에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이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판단한다.
	(물음 2-2) 15점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하자의 승계
	I. 논점의 정리
	갑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바, 하자의 승계법리를 통해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 한다.
	II.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1. 개별공시지가 결정
판례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하여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2. 재산세 부과처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금전 납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Ⅲ.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 의의 및 취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행행
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적안정성 및 헌법 27조의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의 조화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전제요건 충족여부
(1)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처분일 것, 선행행위에 불가
쟁력이 발생할 것, 선행행위는 취소사유 위법일 것, 후
행행위는 적법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한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부과는 모두 처분이고,
	선행행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취소사유 위법이며, 선
	행행위인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인 2022.5.31.로부
	터 90일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행위
	는 설문에서 언급이 없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3.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1) 학설
	<전통적인 하자의 승계론>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
	으로 하면 하자는 승계되고,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이다.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본다.
	(2) 판례의 태도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
	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
	로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93누8542).
	(3) 검토
	생각건대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하자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근거로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사자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수인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에 대하여 재산세부과처분을 다투면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문제 3> 20점 징계 집행정지, 징계의 효력, 국장 조치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B평가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과 징계의 효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한다.

	Ⅱ. 감정평가사법상 징계로서 업무정지처분
	1. 의의*취지 (감정평가법 제39조)
	사안의 업무정지처분은 감정평가법 10조상 업무를 금하
	는 부작위 하명으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법
	상 징계란 감정평가사가 동법 제39조 제1항 위반한 경
	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리는 결
	정으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업계 질서확립
	의 취지가 있다.
	2. 징계의 시효 완성여부
	징계 시효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법 제39조 제7항 위반
	사유가 발생한지 5년내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
	은 3년이 지나 발견되었지만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
	아 업무정지 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Ⅲ. 징계 처분(업무정지 3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및 예외의 취지(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의 제기는 효력의 정지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회복 불가능한 불이
	익을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
	는 원고의 신청에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
	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에 그 취지가 있다.

	2. 집행정지의 요건(적극적 요건/소극적 요건)
	①적극적 요건에는 집행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있을 것, 긴급을 필요로 할 것이 있고 ②소극적 요
	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은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있으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향후 업무가 불가능하며 이를 가중사유로 처벌
	을 받을 수 있는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에
	긴급을 필요로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없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IV. 징계의 효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1. 징계의 효력
	(1) B평가사 징계
	본안에서 감정평가사 B가 청구 기각된다면 그 시점에서
	징계는 유효하게 발효된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본안 판
	단까지 유효하게 되더라도 청구기각이 되면 그 시점

	부터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되어 3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동안 해당 감정평가사 업무는 정지된다.
	(2) A법인 징계과 형사처벌 비화시 양벌규정 적용가능
	소속 감정평가사의 잘못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법인도
	관리 감독을 잘못된 성실의무 위반등으로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징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로 비화
	될 경우에 감정평가사법 제51조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동법 제49조,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될 수도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1) 징계의 공고 (감정평가법 39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
	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징계 사실의 통보 등 (시행령 36조 1항 및 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징계사유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 징계의 효력발생일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3) 감정평가 정보체계 게시 (시행령 36조 3항 및 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사항을 감정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하며, 게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격*등록취소의 경우 3년,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견책의 경우 3개월의 기간까지로 한다.
	V. 결
	B평가사는 집행정지 인용은 가능하나, 본안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면치 못하리라 판단된다.
	<문제 4> 10점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사무소 개설등
	I. 사무소 개설의 의의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사무소 개설이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법 제10조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사무소 개설 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
	Ⅱ.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구성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Ⅲ.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결격 사유
	감정평가사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되는 경우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IV. 결

최근 감정평가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사
법 성실의무 위반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
해 감정평가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령을 준
수하고, 성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 이 하 여 백 > 끝.